

[기자수첩] 가뭄 땀질처방...지하수댐 왜 외면하 나

✎ 홍란 기자 | ㉠ 승인 2025.10.02 17:57 | ☐ 호수 3718 | ☐ 11면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여름철 극심한 가뭄을 겪은 강릉에 지난 8월 30일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돼 24일간 지속됐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고 저수지와 하천이 마르면서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 확보마저 위태로워진 끝에 내려진 첫 가뭄 재난사태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이미 예견된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동해안 지역은 30% 이상이 건천으로 저수량 확보가 어렵고, 짧은 하천 유로와 급경사 탓에 강수의 95% 이상이 2~3시간 만에 바다로 빠져나간다. 최근 강수량마저 줄어 물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다. 실제로 강릉 오봉저수지는 3년째 최저 저수율이 30% 이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상수도 관리에 소홀해 누수율을 줄이지 못했고, 도심 개발과 관광객 증가로 생활용수 수요가 급증했지만 신규 수원 확보는 지체됐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지하수댐’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지하수댐은 이미 운영 중인 지역에서 농업 가뭄을 차단했고, 속초시는 물 자립에도 성공했다. 햇빛 차단으로 녹조 우려가 없고, 도서·산간 등 저수지 입지가 불리한 곳에도 설치 가능하다. 홍수나 재해에도 구조물이 안전하며, 연중 일정한 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남 해남 등 지하수댐 설치를 간절히 기다리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요청한 내년도 기본조사 예산 16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막대한 사업비가 아니라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기초 조사비임에도 “굳이 필요한가”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고 국회·지자체·지역 주민들이 공감대를 넓혀가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가뭄이 반복될 때마다 급수차나 제한 급수로 땀질하는 대책만 되풀이할 것인가. 지하수댐 사업은 조사부터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상시화될 가뭄에 대비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지하수댐은 이미 실효성이 입증된 사업이며,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거론된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상기후가 반복되며 가뭄 사태가 잦아질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국회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하수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홍란 농업부 기자 hongr@agrinet.co.kr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